

정부합동대책반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2016년 3월 15일(화)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배포)

담당: 현장기업지원반

총괄팀장 강경성(02-2100-2601), 김건혁 사무관(02-2100-2600)

금융팀장 손병두(02-2156-9750), 박보란 사무관(02-2156-9753)

기업전담지원팀장 김병근(042-481-4550), 양승욱 사무관(042-481-4543)

1. 개성공단 주재원 대상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 고용유지 위해 휴직수당 정부 지원, 취업 상담·훈련·알선
패키지 지원 확대, 근로자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

2. 대체공장, 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로 인하

- 정부는 3.15(화) 0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 ①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 ②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 ③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하였음

1.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지원방안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임
-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
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

-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지원
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먼저,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
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 -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

-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용유지조치도 수월해지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로 지원하며, 1~3단계를 모두 참여
하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 지급(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

-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백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

- 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하였음

- *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인턴제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개성공단 주재원은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이라도 참여 허용

-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 연리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이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임

2.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중**이나,

-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 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

- * 단, 수도권 투자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공장 신·증설 기준 준수 필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하였음

- * 수도권&인접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9% → 19%, 설비투자비 11% → 21%, (중견기업) 입지매입비 0% → 10%, 설비투자비 8% → 18%

- * 일반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30% 현행유지, 설비투자비 14% → 24%, (중견기업) 입지매입비 10% → 20%, 설비투자비 11% → 21%

-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여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

- * 지자체 사전 유치절차 및 자격요건 심사(상시고용, 사업기간 평가 등) 생략 등

-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 (전부이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분이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 2.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되어 온 기업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먼저,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임

-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되어,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기업**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늘릴 계획**임

* 건당 200만원 미만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던 소기업들은 협력기금 대출 곤란

-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

* 기존에는 건설업종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진기금 특별대출에서 배제

** 보증비율이 100%로 적용되어 금리는 2.7~2.9% 내외에서 형성(보증료율 0.5%)되며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신·기보 특례보증과 중복 지원은 불가

□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식 및 강조 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였음

*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이 미확정된 상태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

□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임

4. 그간 정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추진실적

□ 정부는 2.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생산 정상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참고3)

- 현재까지 **152건 978.8억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였고, **84건 521.9억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하였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을 지급하였음(373억 가지급, 70억 본지급)

- **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운영) **대체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알선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58명이 신규 채용**되도록 지원하였음

- **국세·지방세 58건 55.7억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채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하였으며, **사회보험 감면** 및 **채납처분 유예**조치도 차질없이 시행중

* (국세) 납기연장 24건 42억원, 세금징수 유예 17건 6억원, 채납처분 유예 11건 6억원

* (지방세) 납기연장 4건 1.05억원, 세금징수 유예 2건 0.69억원

-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해 **6건의 납품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가점부여 조치도 시행중임

(2) 향후계획

□ 정부는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통해 **1:1 맞춤형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주요사례 참고4),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을 밀착 해결하여 **조속한 생산·경영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 또한,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 실태신고서 접수 기간 : 3.21(월)~4.10(일)

-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기존 경험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투자금 피해 이외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방향하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임

※ 자료 문의는 안전별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책	소 속	성 명	연락처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김도형 과장	044-202-7210
		김동현 사무관	044-202-7212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지원대책	산업통상자원부	양광석 팀장	044-203-4418
		권순심 사무관	044-203-4419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금융위원회	최용호 과장	02-2156-9750
		박보란 사무관	02-2156-9753
	통일부	하무진 팀장	02-2100-5992
		김래은 사무관	02-2100-5744
		김홍태 사무관	02-2100-5748
		황영호 과장	042-481-4545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염민호 사무관	042-481-4385

참고1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과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대책 비교

구 분	고용위기지역 등	개성공단 지원대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우선지원	우선지원 * 공모없이 직접 선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없음	지원대상 확대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두 포함)
	지원비율 확대 (사업주 부담분의 90% 및 한도인상)	지원비율 확대 (사업주 부담분의 100%)
실업급여	기존제도 적용	기존제도 적용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및 30% 감면
건강보험료	없음	보험료 50% 경감(6개월간) * 해당 입주기업 고용유지자 및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 재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II 허용	취업성공패키지 I 허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기존 제도 적용	소득금액에 상관없도록 요건 완화
청년인턴제	기존 제도 적용 (근무경력 1년미만 청년만 참여 가능)	지원요건 완화 (근무경력 1년이상 청년도 참여가능)
장년인턴제	기존 제도 적용 (최저임금 110% 이상)	지원요건 완화 (최저임금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해당없음
긴급복지제도	없음	긴급생계비 3개월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

* 사업주가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지원

참고2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1. 남북협력기금 기존 대출 금리 조정

□ 금리 2.0% 이상인 협력기금 기존대출을 금번 특별대출 금리와 동일한 1.5%로 일괄 인하

○ 총 80개사 343억원의 기존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적용

* 기존 경험자금대출 2.3~4.2%, 32억 / '13년 특별자금대출 2~3%, 311억

** 既부실업체 5개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책은행 기존대출의 경우 만기도래시 국책은행 특별대출로의 전환이 허용되므로, 대환을 통해 이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음

2. 영업기업 금융지원 강화

□ (협력기금) 영업기업의 순반출액 산정시 정식통관실적 외 간이통관 실적*도 포함하여 순반출액 산출규모를 확대

□ (중기청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임주기업 포함)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 신·기보 특례보증과 중복 불가

○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보증을 공급하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금리는 2.7~2.9% 수준에서 형성되며, 보증료율은 0.5%(보증비율 100%)

참고3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주요 추진실적 (3.11일 기준)

분류	주요 대책	세부 지원내용	추진 실적
자금 지원	① 남북협력기금 연장 및 경험보험 지원	▪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보험가입기업(112개)에 보험금(총 2,906억원) 지급	▪ 80개사 346억원 ▪ 22개사 443억원 지급 (가지급 21건 373억원, 본지급 1건 70억원)
	②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상환 유예	▪ 공공·민간 금융기관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중진공 정책자금 이자상환 유예	▪ 72건 632.8억원
	③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출 및 금리우대	▪ 17건 67.2억원
	④ 5,500억 규모 특별대출	▪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중진공 운영·시설 자금대출	▪ 67건 454.7억원
세제·보험 지원	①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既고지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24건 42억원, 징수 유예 17건 6억원, 체납처분 유예 11건 6억원
	②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既고지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4건 1.05억원, 징수 유예 2건 0.69억원
	③ 세무조사 연기	▪ 조사 착수 원칙적 중단, 진행 중인 경우 신청시 연기·중지	▪ 국세청 세무조사(9개), 지자체 세무조사(73개) 착수 중단
	④ 고용·산재·건강보험 감면 및 납기, 체납 처분 유예	▪ 고용·산재보험은 임주기업 대상 6개월간 30% 감면 ▪ 건강보험은 개성공단 근무 직원에게 6개월간 50% 감면	▪ 60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신청 ▪ 건강보험 경감유지 고시개정 (3.16예정)
정부조달·판로	① 정부조달 납기 연장	▪ 납품연기 요청시 즉시조치 및 관련 제재 면제	▪ 계약진행업체(3개) 안내 공문 발송(2.17), 납기연장 조치(6건)
	② 정부조달 참여 우대	▪ 정부입찰·우수제품 심사 한시적(1년) 가점 부여	▪ 구매적격심사기준 개정·시행(3.2), 우수물품지정규정 개정·시행(3.9)
고용안정	① 근로자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1월 4.3만원(180일)	▪ 44건 443명 접수
	② 장년인턴제 요건 완화	▪ 최저임금 110% 이상 요건 → 최저임금 이상	▪ 장년인턴제 지원요건 완화 운영지침 개정(2.15)
	③ 대체인력 고용 지원	▪ 상담, 훈련, 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 지원	▪ 취업알선 33건(취업자수 58명), 취업지원 상담 186건, 접수 43건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완화	▪ 쿼터 확대 및 기업별 한도 40% 확대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심의 완료(2.24), 접수중
생산기반	① 국내 대체공장 신설 지원	▪ 지식산업센터(산단공) 대체 공장 배정	▪ 7개 업체(12개 호실) 입주계약 체결
	② 창고이용 지원	▪ 공동물류센터(산단공) 등 물류창고 저가이용 지원 (1년 무상, 2년 50% 할인)	▪ 실수요 1개 업체, 시화지식 산업센터 창고 우선임대 예정

참고4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주요 조치사례

- ① 손수건, 우산 등을 생산하는 A사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판로 확보** 등 경영애로에 시달리는 상황
 - 기업방문을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기청과 유관기관 등이 기념품(우산, 양산)을 A사에서 구매***하여 판로확보를 지원기로 결정
 - * 입주기업 9개로부터 8000여만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하여 판로지원 예정
 - 또한, **입주기업의 구매가능 물품을 적극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 협조요청**하였고, 지방병무청에서 A사에 손수건 등 **구매의사 전달**
- ② 전기밥솥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원청업체 C사와 거래중단이 우려되는 상황**
 - C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원자재대금 납입 유예(6.5억원) 및 기존 거래물량 유지(월 10억원 ~ 15억원)를 통해 B사의 경영이 조기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 * C사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시에도 원자재대금 납입유예, 납품단가 10% 인상 등을 통해 납품업체인 B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 ③ 쇼퍼백 등을 생산하는 D사는 주문받은 물량을 납기일에 맞춰 생산하기 위해 접지 등 **수작업공정**을 진행할 **대체인력 200여명이 필요**
 - 지역의 복지재단, 교도소 등의 **직업훈련인력을 공급(170명)**하고, 지자체 **경로당 일자리사업을 연계(50명)**하여 생산인력을 지원